

노동-시민사회 연대
여는 포럼

연대로 스며들다

2023.3.7.화 오후3~6시
공공그라운드 001스태이지



노동-시민사회연대 '여는 포럼' 연대로 스며들다

○ 일정표

시간	내용	
15:00~15:20	개회	사회_유일영 (서울시공익활동 지원센터)
	축사_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윤정숙(60+ 기후행동), 김설(청년유니온)	
1부 들어다 보기		좌장_이병훈 (상임 조직위원장)
15:20~16:30	노동-시민사회의 현황과 연대 과제	신진욱 (중앙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김소연 (들파)
	연결되지 못한 노동들의 무너진 연대 넘어 환대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시민운동의 진단과 과제: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	이필구 (한국마을연합)
	노동, 시민사회의 연대 무대, 솔라시	손우정 (추진기획단)
16:30~16:40	휴식	
2부 함께 토론하기		진행_유일영
16:40~18:00	모듬 토론	참가자 전체
	토론 결과 공유	조별 발표
	폐회	

목 차

- 노동·시민사회의 현황과 연대 과제 _1p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_15p
- 연결되지 못한 노동들의 무너진 연대 넘어 환대 _23p
- 시민운동의 진단과 과제: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 _29p
- 노동, 시민사회의 연대 무대, 솔라시 _39p

솔라시 포럼

‘연대로 스며들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솔라시의 여는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반갑게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노동과 시민사회 사이에 현안 중심의 일시적 연대가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깊고 넓은 연대를 키워가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솔라시는 노동과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성숙한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당돌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솔라시가 이루려는 연대의 의미는 노동과 시민사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뿐 아니라 노동 내부와 시민사회 내부의 굳은 칸막이를 넘어 더 넓고 더 깊은 연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솔라시는 지난해부터 노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연대기금재단의 몇 사람이 우리 사회의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추진해온 기획입니다.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북구 국가들의 연대축제와 같이, 노동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대한민국의 연대축제를 열어보자는 취지에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공익재단이 뜻을 모았습니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많은 단체가 이러한 취지에 선뜻 공감해 주시고 솔라시의 기획-준비 논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한국의 노동과 시민사회의 문제 현실과 연대의 실천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솔라시 기획의 취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솔라시가 유의미한 연대축제로 든실히 준비되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 그리고 활발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솔라시는 한국 사회에서 연대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획입니다. 노동과 시민 사회의 활동가 여러분께서 솔라시의 즐겁고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연대를 실천하고 서로의 신뢰 기반을 다져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외된 불안정 노동을 위해,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활동가, 그리고 독립연구자와 청년 활동가들처럼 그동안 연대의 손길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 솔라시 기획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응원과 지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대의 힘이 절실한 공익활동가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솔라시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연대의 가치가 흠뻑 스며들어 노동 존중과 시민 행복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합창의 힘찬 울림이 널리 퍼져가길 희망차게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7일

솔라시 조직위원회 상임 조직위원장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이병훈

노동·시민사회의 현황과 연대 과제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I. 반노동 극우 검찰국가의 등장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계급, 이념, 권력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해본다면 반노동·극우·검찰국가의 면모가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조직과 권익주장에 대한 공격, 정권 핵심부의 공공연한 극우적 태도, 극우 인사들의 고위공직자 등용, 검사 출신들의 국가기관 장악,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권력남용, 민주적 통제와 시민사회 견제의 미약함 등 심각한 문제들이 전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인권과 복지, 관용, 대화,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들과 그 제도적 구현들을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차원의 위중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퇴행과 위기를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할 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무기력함이 팽배해 있음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때그때 정국에 반응하고 이슈 투쟁을 벌이는 것을 넘어, 지배블록의 이해관심과 전략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항할 노동·시민사회의 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경제·문화의 여러 차원에서 역사적 주기를 다시금 상승기로 전환시킬 전략을 집단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 여론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취임 반년을 넘기면서 몇 가지 ‘개혁’ 프레임을 내걸고 국면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먼저 연금·교육·노동개혁 프레임이 등장했고, 이후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프레임이 추가됐다. 그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화(淨化)하겠다는 발상을 본격화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 복지, 외교통상, 안보, 남북관계, 기후·에너지 등 핵심적 정책 의제들에 대해 ‘반(反)문재인’ 선전문구 이상의 능동적 국정비전과 목표, 로드맵을 내놓은 바 없다. 그런 가운데 정권 핵심부가 지난 몇 달 사이에 내어놓은 연금·교육·노동·정치·시민사회에 관한 ‘개혁’ 프레임은 현 시점에서 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어젠더일 것이다.

이러한 ‘개혁’ 프레임들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오랜 고민거리였던 문제들을 지목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이런저런 전문가위원회와 대화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과 분열이 생겨났다. 하지만 정치현실에서 이 프레임들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포석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선전문구의 미사여구 너머에 있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 기업의 경제적 이익, 극우세력의 이념적 이익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설픈 개혁안을 선포했다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유권자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세대갈등과 재정건전성 담론을 확산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미 비대한 민간보험 시장을 더욱 확대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마도 더 실질적인 이해관심일 것이다.

교육 개혁 역시 디지털전환, 수월성교육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디지털전환은 문재인 정부,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특별할 것이 없고, 우수고교육성 등 수월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특권층 정책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점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권은 제도 개혁보다는 교과과정의 ‘좌파 편향’을 문제 삼는 식의 극우 이념공세에서 더 많은 이득을 기대할 것이다.

정치개혁도 ‘정쟁을 초월한 대통령’이라는 보나파르트 이미지를 선전할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양대정당 카르텔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타당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검찰권력의 확대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는 만큼 보수정치인들의 먼 미래를 보장해주는 일보다는 국민들이 모든 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하게 만드는 단기적 사익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은 다방면에서 지배블록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검찰국가의 존재이유를 보수층에 확인시켜줌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고, 진보·노동·시민단체들에게 도덕적 오점과 이념적 낙인을 남길 수 있으며, 기업과 특권층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의미도 있다.

즉 노동과 시민사회는 반노동·극우·검찰국가라는 괴물의 성장을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되었고, 거기에 얼마나 힘 있게 대응할 수 있는냐는 단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역대 보수 정권의 전략적 패턴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의 노동·시민사회 정책에 나름의 문제와 한계가 있었지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적 운동 세력에 대해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인적 구성과 정책, 담론 등 여러 면에서 그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새롭거나 변형된 면모도 보이고 있다.

개별 사회문제에 대해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좋은 자세지만, 실제 정책을 구현하는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너무 순진하고 관념적이다. 정권은 고도로 결집된 권력집단이며 특히 한국에서 정책결정권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연속성이 있고 진영화되어 있는 파워엘리트 집단의 전략적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과거 보수 정부의 노동·시민사회 전략들의 굵은 선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정리한 뒤에,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현 정부의 성격과 함의를 파악해보는 접근법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조직적, 담론적, 사법적,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직적 분열을 획책하는 전략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제3노총’을 표방하는 ‘국민노총’을 출범시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기존 노조 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를 했다. 민주노총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

KT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2010년에 ‘새희망노동연대’가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들은 노동단체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작업을 기획하여 깊이 개입하였고, 국정원 예산을 이들 ‘새로운 노조’ 세력과의 교류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법원에서 인정되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민병환 당시 국정원 2차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노조과괴전문 극우관료들 중 일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멘토로 초청되어 조언을 주고 있다.

둘째는 이데올로기적 담론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뉴라이트와 반공주의 단체 등 우파 세력은 노조와 시민단체에 종북, 부패, 위선의 이미지를 입히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급진적인 좌파단체나 기층민중조직과 연계된 단체들 뿐 아니라,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온건개혁 내지는 비이념적 성격의 시민단체들까지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 압력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의식조작 기술의 혁신으로 대표적인 것은 ‘세대 불평등’ 담론이 노동탄압의 핵심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계책으로 2015년에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 탈규제와 자유화,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노조 탄압, 성과경쟁 압력 강화 등이었다.

그중 특히 ‘노동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정권은 ‘기성세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청년 실업, 비정규직, 빈곤 문제의 원인이라는 담론을 대량 유포했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당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노인층이었고 그 다음이 50대였으며, 빈곤률 역시 그러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허구였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 확산되고 세련화 됐다.

셋째는 사법적 수단을 통한 노동 탄압이다. 민주화 이후에 노동쟁의를 독재 때처럼 자의적으로 범죄화 할 수 없게 되자, 합법성을 가장하여 쟁의노동자들이 법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받게 만드는 방식이 전면화했다. 이는 경제적 고충을 겪는 노동자들끼리 공격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등, 살인자 없는 살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계급지배 수단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점이 있다면, 검찰권력을 필두로 한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통치양식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개별 사

업장의 쟁의사건에 대해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운동, 진보정당 등 노동·진보 진영 전반을 다양한 죄목으로 법정에 세우는 합법적 탄압(legal repression)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과 폭력의 행사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2012년 SJM과 만도기계 등 여러 쟁의 사례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경총 등 기업인 단체들은 종종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적잖게 개별 기업들도 ‘컨택터스’ 등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수백 명의 ‘용역’들이 쟁의노동자들에게 집단폭력을 가하는 테러가 공권력의 방조와 협력 하에 벌어졌다.

공권력의 노동쟁의 투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기업이 고용한 용역강패의 사적 폭력이 노동쟁의 진압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쟁의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눈앞에서 회칼, 쇠파이프, 쌍절곤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곤 했다. 이런 폭력배들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경비업체’로 둔갑하여 기업화, 조직화, 전문화되었다.

Ⅲ.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민단체 전략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위에 서술한 과거 보수 정부들의 여러 특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또한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먼저 '노동개혁' 프레임의 골자는 노동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비노조,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청년/기성세대 등으로 분열되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그 이득을 정권과 기업이 취한다는 데에 있다. 분열 전략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 의힘, 보수언론, 기업가단체, 우익단체들이 이 방향으로 뜻을 모아 거대한 동맹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분열 전략이 작동하는 기제는, 사회구성원들이 ‘노조’, ‘정규직’, ‘진보좌파’, ‘기성세대’ 등 표적화된 집단 범주에 분노하게 만들으로써 이들 하나하나를 공격하여 진보·노동세력 전반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사회최상층 집단의 정치적 기획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조직적 분열 전략은 이데올로기적 담론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할 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동조하고, '노조'를 공격해서 노동자들의 조직자원을 파괴할 때 비노조인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무능한 고인물로 공격할 때 청년들이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규직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라서, 청년 노조원은 노조원이라서, 중소기업 정규직은 정규직이라서 같은 '을'들의 동조 하에 무력화된다.

이런 단계적 무력화의 과정에서 아무 자원도 갖지 못한 하층 노동계급만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에서 면제되겠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자본과 국가에 맞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 단체들과 노동조직이 모두 무력화된 후에, 그 모든 과정을 지지한 하층 노동계급이 최종적으로 버려진다.

이처럼 우익 정권과 대자본의 동맹이 주변부 노동계급의 상대적 박탈감을 동원하여 조직화된 노동 세력과 좌파 정치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우익포퓰리즘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널리 발견된다. 콜린 크라우치, 토마 피케티, 낸시 프레이저,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여러 진보적 학자들이 이 새로운 정치균열이 진보정치 위기의 결과이자, 그것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분열 전략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치의 또 하나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다. 이 점에서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의 대상은 단연 '노조'인데, 더 깊이 고찰해보면 이에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반노조 노선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정교하다.

그중 하나의 측면은 앞서 언급한 분열 전략의 성격이다. 모든 노조원이 대기업 정규직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사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조원'을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 노조파괴에 대한 대중적 동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이 아닌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선의의 사람들도 이런 지배전략에 자양분이 되어준다.

노조에 대한 공격의 또 다른 측면은 이념적 낙인찍기와 도덕적 상처 입히기다. 국정원 직원과 경찰력을 대거 동원하여 '노조 간첩' 수색 작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만드는 것,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모조리 들여다보겠다고 선포하고 노조의 자료제출 거부에 범죄 위혹을 덮어씌우는 것 등은 모두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시키는 행위들이다.

다음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물리적 강압력의 행사, 또는

행사의 위협이 가용한 전략으로 고려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경찰특공대 투입을 암시했던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등록취소 등 다양한 강압수단을 실제로 동원한 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정부와 보수·경제신문들은 노조 내부의 균열을 벌리기 위해서 ‘MZ세대 노조’라는 세대 담론을 확산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단체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엘지전자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얼마 전에 설립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그 대표적 예인데, 이런 흐름은 기존 노조들 내부의 세대 간 균열을 증폭시킬 잠재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시민단체’는 노조와 더불어 지금 중앙 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보수 정권들의 핵심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진보정권의 후원세력, 부패한 위선자, 세금 먹는 기생적 존재로 몰아가서 정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복지부, 검찰 등 여러 국가기관과 관할 부처가 일제히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지원금 회수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등이 관할 시민단체들을 모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만들면, 현재 수십 만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중 몇 개의 문제적 사례만 찾아내어도 그 사례를 일반화하여 시민사회 전체에 범죄적 이미지를 덧씌워 국가통제 대상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와 더불어, 실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책적 영향력과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협치 채널이 전면적으로 단절되었고, 지난 10여 년 간 각 고의 노력으로 건설된 시민친화적 정책조직과 협치기구들이 폐지되고 있으며, 청년·복지·시민참여 등을 위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IV. 시민사회의 제도적, 조직적 현황

이 같은 정치상황에 직면하여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러 연대조직을 세워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별 단체들과 실천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결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경우에 정부·지자체의 파괴적 조치들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현실을 일면적으로 낙관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민사회라는 장(場) 전체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성과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움직이는 사회 영역으로서, 정부나 기업과 구분되는 제도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동창회, 향우회부터 노조, 비영리단체, 사회운동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처럼 영리·비영리 성격을 함께 갖는 단체들도 부분적으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시민사회 장에서 노동·민중·시민단체들의 조직생태계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중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며 인적으로도 연속성을 갖는 단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연합·여성연합 등 대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정치개혁, 여성,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의제의 운동단체들이 조직적 연계와 연대행동에 참여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했다.

민주화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라는 양대 다중조직장이 형성되고, 양쪽의 단체들이 시민·민중운동의 몇몇 거대단체를 중개자로 하여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조직적 연결망이 많이 이완되었고 중개조직들의 영향력도 약화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시민사회 전반이 약화·축소되었다거나, 민주당과 결탁하거나 그 지지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관점도 있다. 물론 특정 단체나 인물들이 제도정치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약화, 종속, 타락했다는 식의 거친 진단은 지난 20여 년 간의 구조변동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거시적 변화는 전반적인 단체 수 급증, 새로운 부문과 주체의 성장, 장의 구조적 다원화, 기존 단체들의 영향력과 위상 축소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개혁적 시민·민중운동 단체들이 응집력 있게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민주화 직후 상황과 달리 지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수는 대단히 많아졌고,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부문들이 확장되었으며, 그 같은 팽창과 다원화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권력구조 역시 변화했다. 시민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이 중심이던 1990년대와 달리, 지금은 그러한 전통을 있는 운동단체들 외에도 수많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주민자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질적 결사체들이 시민사회 내에 공존한다. 이 단체들의 구성원의 성격, 단체 목표, 재정구조, 정치/행정/기업과의 관계, 개혁성과 사회비판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이 같은 다원화와 이질화에 따라, 과거에 시민사회의 중심에 있던 세력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셋째, 세대적 변화 역시 중요하다. 2010년에 청년유니온의 출범을 시발점으로 하여 노동, 복지, 주거, 부채, 페미니즘, 기후 등 여러 의제 영역에서 청년 사회운동의 큰 흐름이 확산되었다. 청년 단체들은 기존 시민, 노동운동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성장했지만,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기존 운동의 한계를 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아직 시민사회 전반을 혁신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미래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될 잠재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와 정부·기업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큰 자원을 가진 정부, 지자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시민사회가 문제를 감지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모델이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재정에의 종속, 시민단체의 관료화, 정치환경의 커다란 영향 등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하고 달성하려는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보수 정부에게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운 취약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의 구조변동의 함의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양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확장된 시민사회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많은 오래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노동권, 인권, 시민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

며, 시민사회의 팽창은 그러한 정치문화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확장된 시민사회의 많은 구성원은 1990년대 노동·시민운동 단체들보다 사회비판적 인식, 사회구조적 개혁 의지, 결집력, 헌신성이 약하다. 작은 공동체의 소우주 안에서 유토피아의 구현을 소망하는 경우도 많으며, 좋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검찰국가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기 힘들다. 더구나 분산된 많은 단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결과 연대를 조직할 구심점이 되는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문제도 있다.

V. 역사적 주기 속의 현재 국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현재 정치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국면을 절대화하여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장기적인 역사적 주기 속의 하강 국면으로 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윌러스틴, 리피에츠, 킬리, 태로우 등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자본주의, 계급투쟁, 시민권력의 장기파동 추이를 발견해왔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하강 국면에 접어든 원인을 분석하고 재상승을 위한 조건과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에서 고조되었던 민중투쟁은, 1990년 3당 합당과 1991년 투쟁의 패배를 기점으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보수와 자본의 헤게모니가 강화되었다. 이후 적어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민주화, 자유화, 다원화, 민관협치가 크게 진전되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기간에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커졌고 민주당 정권과 노동진영의 괴리가 커졌다.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기에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보수가 획득했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진보적 어젠더와 시민사회가 초토화되었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촛불집회가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촛불집회는 새로운 운동 주기를 여는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파생적 운동들이 등장했다. 그후 상승국면이 시작되었는데 보편·선별복지 논쟁,

무상급식 운동, 희망버스 캠페인, 안녕들하십니까 캠페인 등이 모두 이 흐름 속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압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이 중단되고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사업들이 무산되는 등 총체적인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서, 단체들의 재정 자립성을 높이고 시민대중과 접촉면을 늘이는 반성과 혁신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승국면에서 민주당의 노선, 강령, 정책이 진보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는 등 정당정치의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

이러한 상승국면의 흐름은 2016~17년 촛불과 탄핵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8년 촛불집회가 그러했듯이,= 그와 같은 고조기의 대규모 대중행동은 종종 그 이후의 새로운 역사적 주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체,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언어와 담론, 새로운 행동양식을 탄생시킨다. 하지만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새 시대의 개막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료를 의미했다.

촛불 세력은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개혁을 위임했다. 문 정부 시기 동안 우익의 거센 역공만 계속되었고, 진보적 시민사회는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기력하여 문 정부의 개혁성을 강화하지도, 우익의 반동을 막지도 못했다. 문 정부 중반기인 2019년에 이르면 우익의 대중행동이 진보를 압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촛불집회라는 일시적 대중행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진보 세력의 이념과 노선, 주체를 혁신하는 데까지 나아갔는가? 시민사회 지원 제도의 발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력’의 강화가 이뤄졌는가? 정당정치 영역에서 의미 있는 혁신이 일어났는가? 노무현 정부의 여러 정책실패 이후 곳곳에서 제기된 ‘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은 계속 지체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의 사람과 정책이 지금도 그대로 아닌가?

그와 더불어 역사에서 과거의 경험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놓쳐선 안 된다. 또 다시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대중행동의 폭발이 일어나기만 하면 역사적 주기의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사회구조, 문화, 제도, 정치환경, 시민사회 세대 변화 등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중요하다. 몇 가지 특별한 중요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사회적 균열과 갈등의 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게 됨에 따라 연대의 조건이 변했다. 노동자의 편이고, 생태주의적이며, 페미니스트이고, 소수자 인권에 민감하고,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완벽한 진보주의자는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다차원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지점에선가 연대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폭넓은 운동공동체, 저항공동체, 대안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용과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VI. 연대를 위한 과제와 희망

첫째, 조직적 연대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는 많은 시도와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탈중심화, 다양성, 유연성, 느슨한 연계, 비조직적 네트워크 등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접근은 일면적이다. 안정적 회원구조와 재정기반, 조직력이 없으면 정부나 기업 등 거대권력과 대결하고 협상하면서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환경의 외풍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개인’, ‘자유’, ‘다양성’, ‘유연성’, ‘자발성’, ‘창의성’ 등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담론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담론들은 현대문화의 핵심 가치들에 연결되면서도 실제로는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하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찬미하는 국가와 기업은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조직들이다. 흩어진 개인의 집단지성과 네트워크가 거대조직을 이긴다는 것은 낭만적 자유주의의 신화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노동계급과 시민사회 주체들의 ‘조직적 권력자원’을 해체시키고 도덕적으로 탈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이 국가와 기업이라는 거대권력에 맞서 자신의 자유와 권익을 지키는 무기인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에게서, 시민단체를 시민들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시민들의 일상세계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이고 비조직적인 소통 네트워크

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접속하는 통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공식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사회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지향을 갖는 수많은 소모임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연결행동들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조직과 네트워크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양자의 발전이 서로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영영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수많은 소모임과 해시태그 캠페인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이 운동의 젊은 참여자들은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유서 깊은 단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분야의 운동조직들은 일상의 미시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또 그 네트워크로부터 맨파워를 충원 받는다.

특히 오랜 활동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조직체계와 재생산구조가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 2천 년대의 확장된 시민사회 장 안에서 이러한 단체들의 위치는 과거와 달라졌지만, 그 역할의 무게가 작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젊은 활동가들을 채용하거나 교육하고 성장을 돕는 일, 소규모 단체들이 서로 연결할 공간을 제공하는 일, 자문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일 등 많은 역할이 있다.

셋째, 세대 간의 이음을 위한 노력, 특히 진보적 청년 집단의 리더십 성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이 긴급하다. 이들이 동세대 내의 극우적 힘을 압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주도력을 가질 수 있게끔 연대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젊은 세대 활동가 및 참여자들의 고충과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반영하는 방향의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 내의 권력 문제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다. 인구 전체로 보았을 때 윗세대가 청년세대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윗세대는 대체로 더 높은 직급에서 ‘위계 권력’을 갖고 있는 데다 한국 문화의 ‘나이 권력’까지 더해진다. 게다가 많은 단체의 임원진의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젠더 권력’까지 중첩된다. 다중적 권력불평등 관계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연령서열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평등한 소통과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중시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발적 참여와 헌신의 동기가 생겨난다. 시민단체나 노

조에서 이런 욕구를 기업이나 정당만큼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청년 구성원들은 노동·시민단체를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진보적 신념과 가치지향을 가진 청년들이 노조와 진보적 사회운동, 시민단체들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정부, 기업, 우익단체들에 앞서 한국사회의 미래 리더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청년들이 동세대 내의 정치적 경합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시대정신을 창출해갈 수 있다.

넷째, 끝으로 지배블록이 지금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는 진보·노동·시민단체들의 약점을 더 깊이 성찰하고, 분열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분열을 획책하는 전략이라는 비판만으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할 대중적 기반을 창출할 수 없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세력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구조, 노동단체들과 주변부 노동자들 간의 괴리,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 간의 거리, 시민들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더 많이 접촉하는 듯이 보이는 일부 단체들, 이런 현실들이 분열 전략을 허용하는 객관적 토대들이다.

해외에서 폭넓은 연대를 창출한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의 거대 노조들이 비정규 노동운동을 지원하거나 여성, 청년, 이주자, 무주택자, 신용불량자들과 연대하고 지원한 사례들, 200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노조, 페미니스트, 청년단체, 기후운동, 주거권 운동 등이 연대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여론과 문화적 분위기를 바꾼 사례 등이 유익한 참조점이다.

2018년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들이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 운동은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미래를 위한 교사들’, ‘미래를 위한 과학자들’, ‘미래를 위한 부모들’ 등과 같은 많은 파생적 운동들을 탄생시켰고, 그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 여론 지형이 변함에 따라 이에 압력을 받은 유럽 각국 정부들이 2019~2020년에 ‘유럽 그린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성공적인 사회적 연대는 이처럼 정치와 정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역사적 주기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장연구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향후 과제로 시민사회 지식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¹⁾ 끝으로 ‘노동과 시민 사회의 연대’에 대한 단상을 말씀드리며 발제를 마치겠다.

1. ‘시민사회 활성화’ 연대활동의 성과와 한계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의 권력 남용과 시장의 자원 독점을 견제하면서 시민적 덕성, 사회적 자본, 자율적 공론장을 창출하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한 토대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모두 시민사회의 주요한 영역이자 주체이다. 국내에서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은 삶터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찾고, 호혜의 문화를 형성하며, 민주적 사회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고려, 또는 노동운동 그룹과의 소통은 없었다.²⁾

1)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 정책, 지식생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소연·신권화정·김승순(2022), 김소연(2023) 참조

2)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조직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을 분리하는 인식과 현실이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는 법제도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환경(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담론에서 나온 의제이다.³⁾ 1990년대 이후 확장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화, 민주주의의 퇴행, 사회통합 약화로 시민사회의 근본토대가 약화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사회불평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공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청되었고, 관련 제도정책의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이 국제사회에 보편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사)시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인큐베이팅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의 내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동은 주로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시민사회 8개 영역의 연대체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시활넷)’를 구성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대활동은 3대법의 제개정에 주력하였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개정)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부/국회와 협의, 토론회, 전국 캠페인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⁵⁾ 아직 입법 완료된 건은 없다.

3) 서울시 등 지방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로 정의한다(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4) 시활넷 참여조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회원단체 304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23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225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46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38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54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103개), 한국지역재단협의회(11개) (사무국 : 사단법인 시민)

5)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규정은 없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사회 기반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2개 광역자치체의 조례에 따라 이미 행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 개입 여지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기부금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개정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촉진하자는 목적이다.

성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정책원칙으로 명시되었다. 규정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4)’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기부활성화, 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비영리일자리 활성화 등 33개 과제가 안착하였다. 나아가, 규정에 근거해 다수의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협치형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개선’, ‘온라인총회 상시허용을 위한 지침개정’ 등 실천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규정은 폐지되었다. 규정 폐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구성되어 지난 20여 년간 유지됐던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중단되었다. 기본계획의 이행 동력은 희미해지고, 향후 지속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뀐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서울시, 충남도 등에서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협치 등의 정책이 중단되거나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 관련 부서들이 없어지고, 반복되는 정치감사와 함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폐쇄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부정이익을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1조 지원... 서울시의 공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략” 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그 어떤 실체적 근거도 논리적 정당성도 없다.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는 정치 진영논리가 끼어들 근거도 이유도 없다. OECD, 세계은행 등 실상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를 하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이 상황을, 그래도 반대하는 여론, 하다못

해 이를 전환할 내적 동력조차 형성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찬찬히 짚어보고, 진단하며 과제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연구자인지라 아무래도 지난 실천 과정을 되짚어보면 자료를 축적하고 근거와 논리를 만드는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다.

“정책 이슈가 등장하였을 때 정부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씽크탱크로부터 산출된 정책 지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시민들도 스스로의 씽크탱크로부터 산출된 정책 지식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게임은 공평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혁, 2014: 11).

시민사회는 왜 존재하는지, 공익은 무엇인지, 공익활동은 사회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해왔는지, 실제로 코로나19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등 자료와 사례를 모으고, 근거자료를 만들고, 토론하고 성찰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상황은 좀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다.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현장의 새로운 흐름

“사회 운동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회 운동의 ‘상징’과 ‘실행’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대립하는 사회 가치, 목표, 상황과 조건에 맞설 수 있는 운동 집합체의 가치와 목표를 구체화하고 상황과 조건을 해명하고 평가하는 자원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박영신, 2006: 102)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재개정을 지원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지식의 갈급함을 느낀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조리 있게 설명하고, 현상을 해석하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격려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줄 그런 지식 말이다. 시민사회 실천현장은 그런 지식이 생산되고 순환되는 지식생태계를 갖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는 국가, 시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제도화된 지식생태계와 다르다.⁶⁾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는 ① 국가 권력과 자본의 지배(“체계”)에

통제, 왜곡되지 않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지식생태계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② 생활세계의 문제에 천착하여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한편 더 나은 삶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일깨우는 대항적 지식을 생산하며, ③ 성찰적, 개방적, 혁신적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며, 생산된 지식은 ④ 소통과 재생산의 선순환 속에서 사회공동체의 공공재로서 축적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사회 지식생태계의 주체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간 지식의 산실로 여겨졌던 학계, 대학에만 전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식사회에 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강요했고, 신진연구자들은 오롯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숫자로 연구역량을 증명해야 처지에 내몰렸다(신희영, 2014; 한준·김수한, 2017). 이러한 풍토에서 연구자의 현장 개입과 실천지식 운동의 명맥도 끊겨가고 있다(김원 2008; 정정훈, 2020). 몇몇 학자들이 실천 현장에 결합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지식과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의 성격은 다르기에 그들에게 실천적 지식인의 자세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현장에 필요한 지식생산에 몰두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실천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활동가, 액티비스트리서처, 독립연구자, 현장연구자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9년 2월에 열린 ‘액티비스트리서처들의 컨퍼런스’⁷⁾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컨퍼런스에 “구름같이 사람이 몰렸다”고 표현하며 “연구가 먼저냐 활동이 먼저냐, 연구가 본질이나 활동이 본질이나가 중요하지 않고 연구활동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⁸⁾

6) 지식생태계는 생태학적 관점을 접목해 지식의 생산과 공유 및 소비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적 틀로, 지식을 둘러싼 행위주체, 구조, 과정 등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7) 우리가 흔히 액티비스트리서처(activist research)를 활동가의 연구, 또는 연구활동가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 개념을 고안한 Hale은 ‘activist research’에서 activist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적 용법으로 연구방법이 구상되고 수행되는 즉, 연구방법론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순수(pure)와 적용(applied)의 이분법이 아닌 제3의 길은 여는 방법으로 이 연구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지식, 분석, 이론적 이해를 생성하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Hale, 2008: 4).

8) <https://brunch.co.kr/@labfinding/16> AYARF(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리서처 펠로우십) 컨퍼런스 후기-1

지난 1월에는 ‘2023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연구’ 또는 ‘연구활동’에 혼란스러워했다. “직업연구자가 아닌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밝힌 평화활동가(석미화, 평화아카이브 대표)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연구는 활동의 길이 되어 주었고, 활동은 연구를 통해 깊어졌다”고 하며, “연구는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물 또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말한다.

석미화 대표처럼 ‘실천’을 위해 ‘더 나은 활동가가 되기 위해’ 연구하는 활동가가 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민간재단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활력향연>을 꼽을 수 있다. 활력향연은 ‘활동가의 역량강화’의 목적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사)시민이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⁹⁾ 선정된 활동가가 직접 책임연구자가 되어 5백만 원의 지원금으로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한다. 이 기회를 통해 활동가들은 활동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쓰며 자신의 언어와 논리를 가다듬는다. 연구물을 활용해 책도 발간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활동가의 연구라고 허술하지 않다. 총 237편을 검토해 <현장지식X좋은연구>로 선정한 수상작 10편 중 3편이 이 활력향연에서 나왔다.¹⁰⁾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이들도 늘었다. 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10~20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1인, 네트워크형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또는 단체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한다.¹¹⁾ 듣는연구소, 공공의제연구소, 비영리경영연구소, 시민자본연구소, 더가능연구소, 영리한연구소, 마을학회 일소공도 등 다종다양한 연구소가 전국에서 생기고 있다. 대다수가 소규모와 영세성을 벗어나지

9)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센터가 사업을 중단하여 지금은 (사)시민이 이어서 하고 있지만,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이 사업에 연구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10) 현장지식X좋은연구는 사단법인 시민이 공개추천과 자체 발굴과정을 통해 237편의 연구결과물을 취합해서 심사를 거쳐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성, 당사자성, 주제성, 공동연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 함의와 활용도에 주목하여 심사가 이루어졌다.

11) 연구활동가와 연구공동체가 내세운 레토릭은 주류지식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다. “자기 삶의 연구자”(서울시청년허브),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은 연구자다”(희망제작소),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일소공도_일만 하면 소 공부만 하면 도깨비”(마을학회), “생활과 지식, 연구와 실천, 현장과 정책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연구자”(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등.

못하고 해결과제가 많지만, 시민사회 지식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사회 지식생태계가 앞서 거론한 활동가들의 연구, 연구활동가, 단체형 연구소들만으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분명 제도권 학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계와 실천현장의 지식 추구의 목적이나 연구방법이 같지 않다. 현장이 필요한 지식을 학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천현장의 중심성이 떨어진 그들의 관심을 현장으로 돌리고, 그들을 학문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자극하게 할 것이다. 상호 긴장이 있어야 협력이 일어난다.

3. ‘노동-시민사회 연대’에 대한 단상

노동-시민사회의 연대라는 주제를 접하고 느낀 소감을 공유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노동과 시민사회 연대’라는 표현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한다. 노동-시민사회 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노동조합과 여타 시민사회조직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노동의제와 환경/여성/인권 등 의제간 연대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농업계/농업운동은 왜 빠져있는지 등등 의문이 들었다. 필자는 시민사회를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다. 현실에서 노동계, 시민사회계, 이런 말이 쓰이니 “노동”, “시민사회” 연대하면 느낌은 대충 전달된다. 그러나, 특정 시대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이해되는 방식이나 상징이 더 넓고 깊은 연대를 막지는 않을까 우려된다.¹²⁾ 노동운동을 포함해 범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가치, 조직, 활동방식, 문제의식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의 비전과 표현이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활동가’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연대(솔라시)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이 활동을

12)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용어/개념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도 늘고 있다. 기성세대 활동가들(흔히 586으로 묘사되는) 자신의 활동을 표현하던 시민단체, 시민운동, 사회운동가라는 개념이 신세대 활동가들에겐 다르게 이해되고 혹은 거부된다. 그들은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비영리스타트업, 소셜벤처 등으로 자신의 활동을 표현한다.

통해 실현하려던 가치가 부정당하고, 활동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척박해졌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웃으며 공통기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뭐라도 해 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등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큰 방향에서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란 것, 내가 몰랐지만 여기저기 시도가 꿈틀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지금 활동가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

만일, 연대가 일회적인 연례 행사만이 아닌 다른 기획과 함께 고민하라는 것이 라면, 활동가들이 배우고, 토론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프로그램(학교)도 생각해 으면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져도 ‘활동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활동가가 우리의 자산이고 희망이다. 활동가들의 삶과 노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소연 (2023). 키노트3.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연구활동가, 「시민사회 현장연구: 연결하다」, 2023 시민사회 현장지식컨퍼런스 자료집, (사)시민. 2023. 1. 9.~11. 제주.
- 김소연·신권화정·김승순(2022). 제2장 국내맥락: 시민사회 지형, 정책, 지식생태계(pp. 18-117), 이광희 외,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원, (2008). 1987년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의 변화. 「경제와 사회」, 33-57.
- 김혁 (2014). 지식국가의 등장과 새로운 시민 거버넌스 형성의 가능성. 「21세기정치학회보」, 24(3), 75-91.
- 박영신(2006). 사회운동의 역동 구조: 상징, 지식, 실행. 「사회이론」, 30, 97-121.
- 신희영(2014).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경제와 사회」, 103, 83-102.
- 정정훈 (2020). 비제도권 지식운동의 궤적과 동시대의 지식운동 연구를 위한 시론. 「문화연구」, 8, 5-25.
- 한준·김수한 (2017).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1), 1-37.

연결되지 못한 노동들의 연대 너머 환대

조건준(아무나유니온)

초연결 시대의 불균형

우리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언제나 연결되어 살아가는 초연결 시대다. 그러나 요즘 노동을 만나면 강렬한 모순을 느낀다. 이중노동시장이나 분절적 노동시장 등으로 노동의 단절을 말한다. 대규모로 모여서 일하던 때와 확연히 다른 플랫폼 경제에 접속된 노동은 물론이고 아웃소싱으로 밀려나 분산된 노동은 결의 노동과 접촉할 기회가 줄었다. 새로 등장한 노동과정은 집단 문화를 해체한다. 접속은 넘치고 접촉은 약하다. 온라인을 통해 사회성은 늘어날지 몰라도 오프라인 집단성은 약하다. 디지털 신호를 통한 접속은 문자, 음성, 영상 등이지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오감에 육감을 더하는 대면 접촉에 비교할 때 단편적이다.

카톡방 등 온라인으로 노조에 가입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 얘기에 당혹스러웠다. 온라인 관계에 머물다가 오프라인 관계를 장악한 사용자에게 빼앗기고 복수노조 설립으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사례에서 접속은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을 차단한다. 접촉 약화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어렵게 한다. 결사의 자유와 자주적 단결권이 연결되지 못한다. 시민권과 노동권을 단절하는 걸림돌이다. 집단적 노동 문화가 분산된 노동으로 흩어진 지금, 20세기 발명품인 산별노조나 정당으로 21세기 단절을 넘을 수 있을까.

"와이파이 잘 터져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듯 자

꾸 되묻던 광고를 기억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실시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오작교를 떠올리면 궁상일까. 연결의 홍수 속에 단절이 있다. 지금 필요한 연대는 초연결과 대분절, 접속과 접촉, 사회성과 집단성의 불균형을 넘어서는 것이다.

권리의 오작교를 향한 노력은 쉽 없다. 방송작가 유니온 권지현 작가에 따르면 "노조를 한다는 것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공감과 이해가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분노하는 것은 정치적 연극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들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길을 다르게 다시 찾아야 한다.

마음에서 채굴하는 연료

사회가 차가울수록 지구는 뜨거워진다. 기후위기를 화석 연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 돌이켜볼 것은 인간 심리에서 채굴해 불태우는 경쟁 연료다. 무한 성장 연료로 과소비해온 경쟁, 마디마디 끊겨 분절된 노동시장, 습관이 된 각자도생으로 연대는 흔들려왔다. 차별을 피하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소비를 늘리고 탄소도 늘어나 지구는 뜨거워졌다.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된 미래 워크숍에서 40% 사람이 폭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붕괴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청년들만이 붕괴 미래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2015년 연구에서 40~50대 37.9%가 붕괴 미래를 선택했다.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4%가 탈성장 사회나 대안 사회를 30년 뒤 미래 사회로 희망했다. 성장주의에 피로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성장에 중독된 사람들에 의하여 문힌다.

지배 엘리트들은 요란하다. 다극화로 불안한 세계질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남북, 낯선 진영들의 정치 없는 정치, 저성장에 허우적거리는 경제에 둘러싸인 엘리트들은 자신감을 잃고 희생양을 찾는다. 비전은 없고 비난만 있다. 정적과 노조를 타깃으로 적대를 부추긴다. 불안한 지배 엘리트의 집단 심리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시장교섭력을 가지거나 규모에서 나오는 단체교섭력을 가진 노동은 계층 사다리 위쪽으로 움직인다. 시장교섭력도 단체교섭력도 없는 노

동시민은 사다리 아래에서 존버정신으로 살아낸다. 이 간극을 파고들면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공격이 계속된다. 이렇게 노동 내부 간극이 명확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연대는 얼마나 가능할까.

3대 성찰, 환대 3정

진영에 갇힌 연대는 적대다. 자기 진영을 모으기 위해 적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적개심을 더 예리하게 버리기 위해 과격한 언어로 씹는다. 이견을 가진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극복할 상대가 아니라 당장 없애야 할 적으로 만든다. 연대는 적대고 적대가 연대다. 서로에게 혐오를 퍼붓는 광장의 집회에서 흔해진 모습이다. 이익과 권력을 둘러싼 적대는 타오르고 권리 사각지대 시민의 삶은 쪼그라든다. 이권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가 약하면 사회 갈등은 기득권자들의 패거리 싸움이 된다.

간극을 외면하는 연대는 냉대다. 권리 사각지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연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닫힌 시스템이다. 각자도생의 경쟁사회에서 자원을 가진 자들만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업적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정당한 사회 윤리로 여긴다. 노동자가 노동자 연대를 배반한다. 우리는 능력주의를 앞세워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연대를 배반하는 사례를 겪고 있다. 노동이 노동에게 내뿜는 냉대다.

과거의 기억으로 하는 연대는 끈대다. 노조 밖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분할된 노동의 물리적 거리를 잇는 오작교 건설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목소리 높여 투쟁할 때만 다가오는 연대는 조직 없고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른 세계의 것이다. 변한 노동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채 가르치려다 부담만 주는 연대의 속살도 살펴야 한다.

적대, 냉대, 끈대의 3대를 성찰할 때에 적대를 넘을 우정, 냉대를 넘을 온정, 끈대를 넘을 다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3정이 연대를 재구성할 에너지다.

충분하지 못한 연결들

공장을 넘어 지역을 잇고 지역을 넘어 산업을 잇던 연대는 노조의 지역본부와 산업별 조직 시스템이 되었다. 발전이다. 노조 밖의 노동에 충분히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운동이 아닌 제도다. 전투적 집회에서 시작되어 매년 열리는 노동자 대회는 때로는 성격이 모호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노동시민의 연대는 대부분 투쟁연대다. 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어야 달려오는 사후적 사건이다. 집회에 모이려면 일상과 단절이 필요하다. 동원할 조직이 없거나 주목받을 투쟁을 할 수 없는 노동시민에게 이용 불가능한 티켓이다.

환대를 위한 노력들이 있다. 생활문화연대를 위한 노력은 희망연대노조가 만든 ‘희망씨’에서 철도노조의 ‘희망철도’로 희미하게 연결되는 부분적 사례다. 연대기금을 만들어 나눈 지역도 있지만 전국적 전 산업적 모델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비 일부를 지역연대기금으로 사용해 신생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산별노조의 장치는 그 의미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직업이 되지 못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공익 활동가를 위한 ‘동행’도 연대지만 노동계가 대폭 결합하는 새로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사용자와 사업장 규모도 취약한 노동이 상부상조하는 공제회는 기성노조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연대인 디지털 연대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오프라인의 조직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대통령실 답변과 조치, 국회에서 다루게 하려는 온라인 청원도 사이버 연대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듯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온라인은 오프라인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같이 만드는 가치 연대야말로 연대의 재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권은 동물권을 거쳐 지구별의 모든 생명을 향해 간다. 2022년 9월 24일의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연대를 재구성하려는 가치 연대다. 그러나 인간을 차별하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어렵고, 인간계에서 막힌 권리는 생태계로 확장이 어렵다. 일자리 지키기로 후퇴하는 연대, 성장주의에 물든 일자리 늘리기 연대는 벌써 낡아버렸다. 일자리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나눔과 돌봄’의 새로운 노동윤리가 탄소를 줄이고 지구별 생명까지 보듬어 안을 환대다.

노동시민 연대축제

노동을 데이터로 취급하는 플랫폼은 숨겨진 알고리즘으로 설계된다. 오늘날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숨겨진 의도까지 계산해서 플랫폼을 만든다.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열리고 충실히 들으며 함께 만드는 축제가 필요하다. 설계된 회의(컨퍼런스)보다 열린 광장(언컨퍼런스)을 만들자.

누군가 만든 설계도를 보고 참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이 앞선다. 함께 만드는 축제에 필요한 것은 발견이다. 각각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자. 이를 위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의 축제는 이제 시작이며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확인된 것을 키우는 ‘스케일 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스타트 업’이다.

노고를 떨쳐낼 편한 휴식을 원할 수도 있다. 강박을 떨칠 어울림을 원할 수도 있다. 답답한 관성을 깰 아이디어를 원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듣고 간접 경험을 늘릴 수도 있다. 엄격, 근엄, 진지한 엄근진 투쟁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갈구할 수도 있다. 인적 물적 지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 과정의 상호작용에 충실해야 다정한 오작교가 탄생할 것이다.

노동을 위한 세 마당을 상상해 본다. 첫째, ‘큰 걸음을 위한 첫걸음’이다.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고 어울릴 마당이다. 둘째, ‘짧은 노조 긴 미래’다. 성공, 시련, 소멸을 겪는 짧은 신생노조들이 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경험과 고충을 나누는 마당이다. 셋째, ‘새로운 언더독 중간조직’이다. 기성노조와 무권리 노동 사이에서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간지원조직의 비전을 생각하는 마당이다. 더 발랄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마당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같은 공동체의 팀원이다. 노동자는 시민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우리 모두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격차와 함께 우리는 특권을 가진 계급과 무권리 계급·계층으로 이별했다. 벽을 넘어 환대하자. 지속가능한 노동시민연대의 첫 걸음으로 가칭 ‘솔라시(Solidarity of Labor and Civic Society)’를 열자.

솔라시, 연대로 스며들다

시민사회운동의 진단과 과제

: 새로운 연대를 꿈꾼다. - 벽을 넘으면 다리가 됩니다.

이필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벽을 밀치면 문이되고
벽을 넘으면 다리가 된다.

벽을 넘힐 생각이 있는가?
벽을 넘힐 힘이 있는가?
벽 너머를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ANGELA DAVIS

시민사회 개념 및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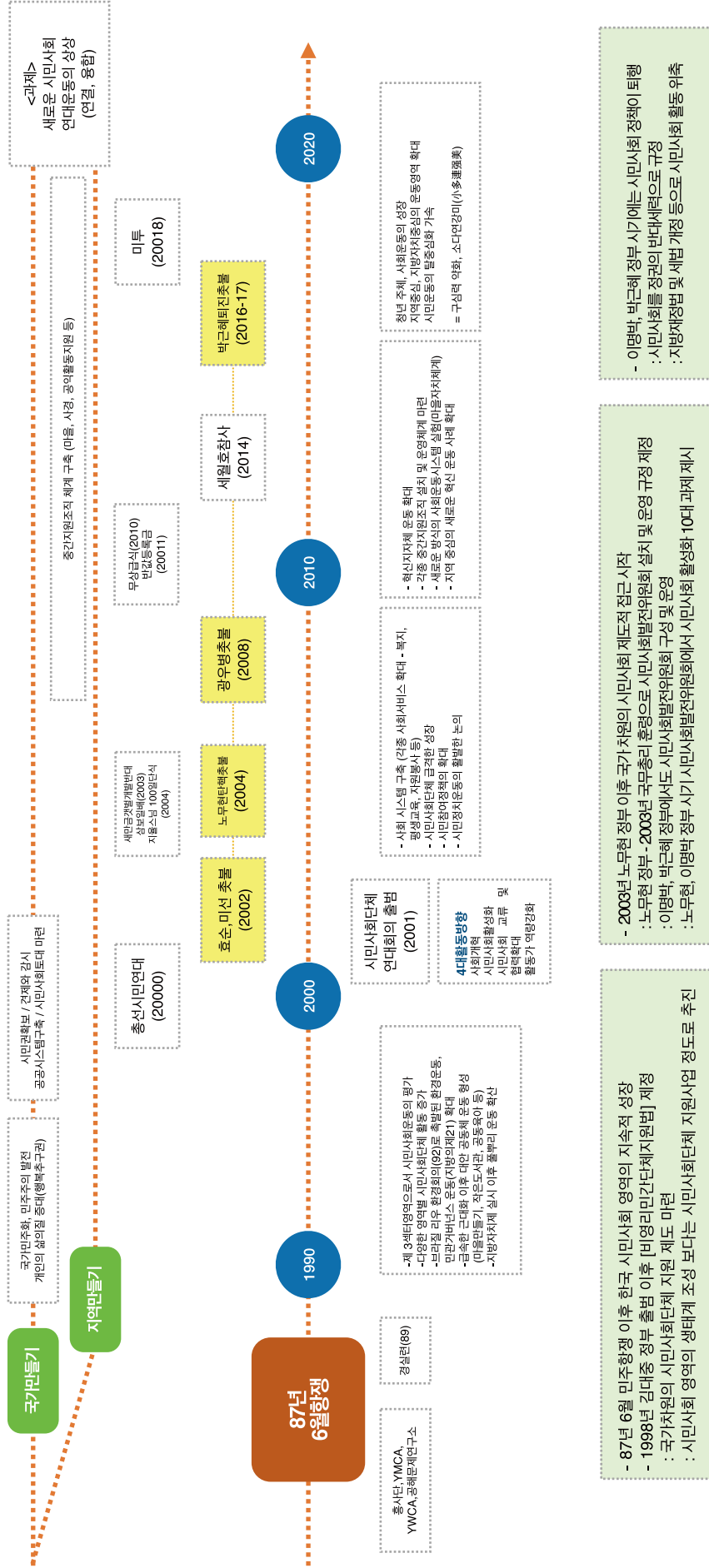


국가	현황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 15,473(2022.6. 기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23,679(22. 11 기준) 사회적기업 3,436(22. 11기준) 마을기업 1,697(21.12.기준) 자활기업 1,062(2020.12.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41,544(2020.12. 기준)
영국	자선위원회 등록 단체 200,000
호주	ACNC 등록단체 56,000
미국	비영리단체 294,000

시민사회는 반민주적인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적의미에서 국가, 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역으로 시민과 그 결사체를 의미

폭넓은 시민사회 영역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

시민사회 형성 및 발전 방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

-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 : 1958년 법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유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75년 제정, 큰 변화 없음
- 기부금품법: 1949년 기부통제법 /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 법(사전허가제) / 200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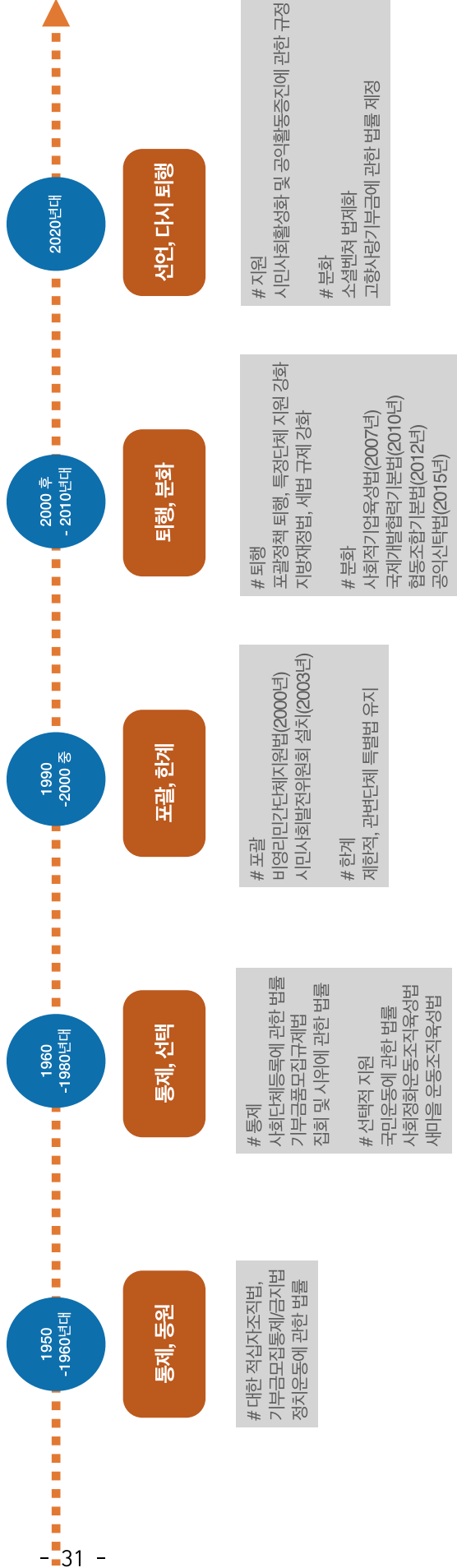
- # 문재인 정부, 시민추진시대 천명
시민사회 활성화 국정과제에 반영
- # 윤석열정부 이후 다시 퇴행 흐름
대통령령의 제정 및 폐기

이명박, 박근혜정부

민주주의의 진전, 시민사회 성장

권위주의, 군부독재 시절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이후 나라재건 위해
시민사회 동원, 원조 활용



* 출처 : 김소연, 조철민, 이강주, 오현순, 옥미애, 김문주(2018) 서울시 시민사회 정책제언 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주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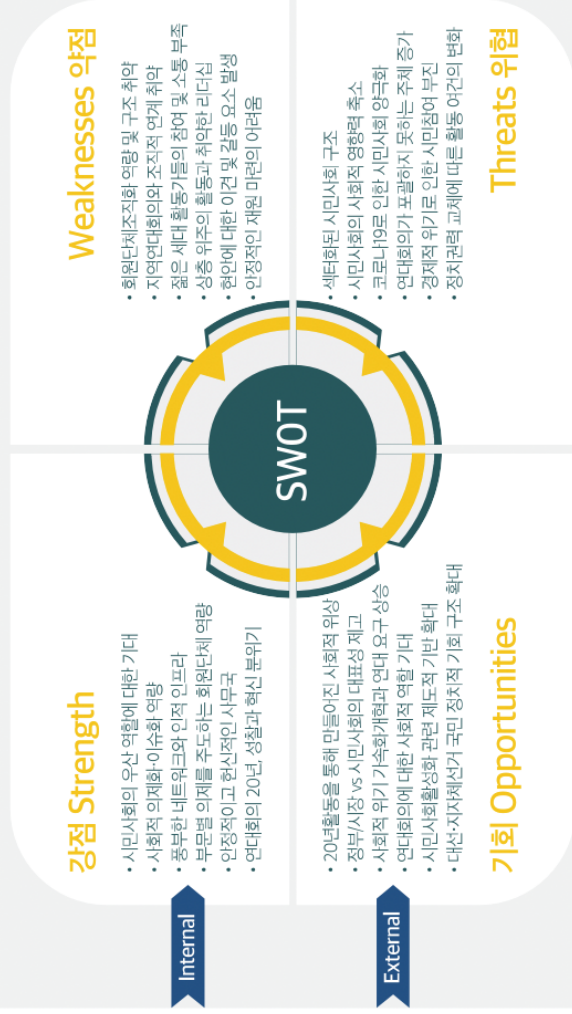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한 방향 모색

연대운동의 목표, 방법 구체화

<질문>

- 시민사회까지 확산에 기여하는가?
- 시민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 누구의 권한과 역할을 키우는 운동인가?
- 시민운동을 통해 주체가 형성 되는가? 활동가는 성장하는가?
- 영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운동인가?
- 시민사회 토대가 쌓여가는 지속가능한 운동방식인가?

그림5 연대회의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위상 • 정부/시장 vs 시민사회의 대표성 제고 • 사회적 위기 지속화개편과 연대 요구 상승 • 연대회의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 • 시민사회활성화 관련 제도적 기반 확대 • 대안·지지체선거 국민 정치적 기회 구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화된 시민사회 구조 •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 축소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양극화 • 연대회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주체 증가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시민참여 부진 • 정치권력 교체에 따른 활동 여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우선 역할에 대한 기대 • 사회적 의제화-이슈화 역할 • 풍부한 네트워크와 인적 인프라 • 부문별 의제를 주도하는 회원단체 역할 •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무국 • 연대회의 20년 성찰과 혁신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단체조직화 역량 및 구조 취약 • 지역연대회의와 조직적 연계 취약 • 젊은 세대 활동가들의 참여 및 소통 부족 • 상층 위주의 활동과 취약한 리더십 • 원인에 대한 이견 및 갈등 요소 발생 • 안정적인 자원 마련의 어려움
SO 내부강점+외부기회		WO 내부약점+외부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총론적 개편과제 주도 • 시민사회 우선 역할에 대한 기대 • 사회적 대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회의 조직력 강화 • 참여구조의 활성화 • 안정적인 자원 확보 	WT 내부약점+외부위협	
ST 내부강점+외부위협		WT 내부약점+외부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활성화·제도적 기반 강화 • 다양한 그룹과 협력기반 확대 • 다층적·일상적 연대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채널 다변화·직접 소통 강화 • 개방적 플랫폼 역할 강화 •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주년 토론회 키워드

“시민운동이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각각의 부문 운동이 열심히 잘 성장해서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 주체들을 어떻게 연결 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단체 중심으로 네트워킹하는 것과 더불어 인권활동가, 기후위기활동가 등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존을
위한
전환



시민운동의 위기인가? 시민운동의 성장인가?

커졌지만 그만큼의 힘이 없다
많아졌지만 각자 도생, 연결이 약하다.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가능할지 고민이다.
일은 많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사업만 보인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은 확대 되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가?
(칸막이 구조, 역할과 속도, 정책융복합, 사회적영향력 축소)
정책과 전략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양은 커졌는데, 그만큼의 역할은 확대 되었는가?



**지속가능한 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상상이 필요합니다.

제도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본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노력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시스템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불안 / 불확실한 사회

기후 환경 시대 혐오 / 갈등 확산

변화

기존 시스템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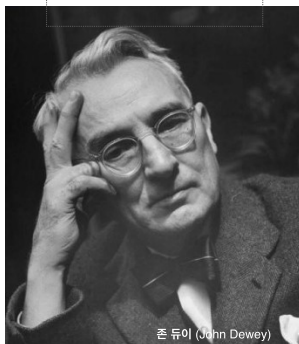
자치분권 2.0 시대, 시민 역할 확대

사회혁신 요구 증가	자치분권 시대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의 한국사회와 제도권 시스템의 한계 : 저출산, 고령화문제 - 출산율 1.24 / 고령화율 11.4% - 24.3%(2030년) : 사회복지수요급증 : 노인, 아동, 청소년 : 교육비 부담증가 - 사교육비 20조 400억 (1인당 22만원 / 월) : 고용없는 저성장 - 실업률 3.4%(청년 9.6%) :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성장전략시스템 한계 • 비효율적이고 피로감에 쌓여있는 중앙집중형 정부 시스템 한계 극복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32년만에 통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시작. :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정관리(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형 국가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방향 : 역할정립으로 새로운 정부운영방식구축 •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 강화 : 보건,복지기능의 지방정부 이전 : 교육자치기능의 지방이전 : 지역경제 (산업)기능의 지방이전 • 분권과정에서 자치와 협치 체계 강화 : 시민권한 강화, 동체계 운영시스템 구축

11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이다”



사회를 운영하는
 시민의 역할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사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에서 시민 역량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시민역량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힘, 시민사회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새로운 가치 형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976



“국가와 헌법의 민주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를 사회의 형식이자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5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한 방향 모색

<질문>

시민사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구의 권한과 역할을 키우는 활동인가?
영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인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가?
시민사회 토대가 쌓여가는 지속가능한 활동방식인가?

아테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한 정의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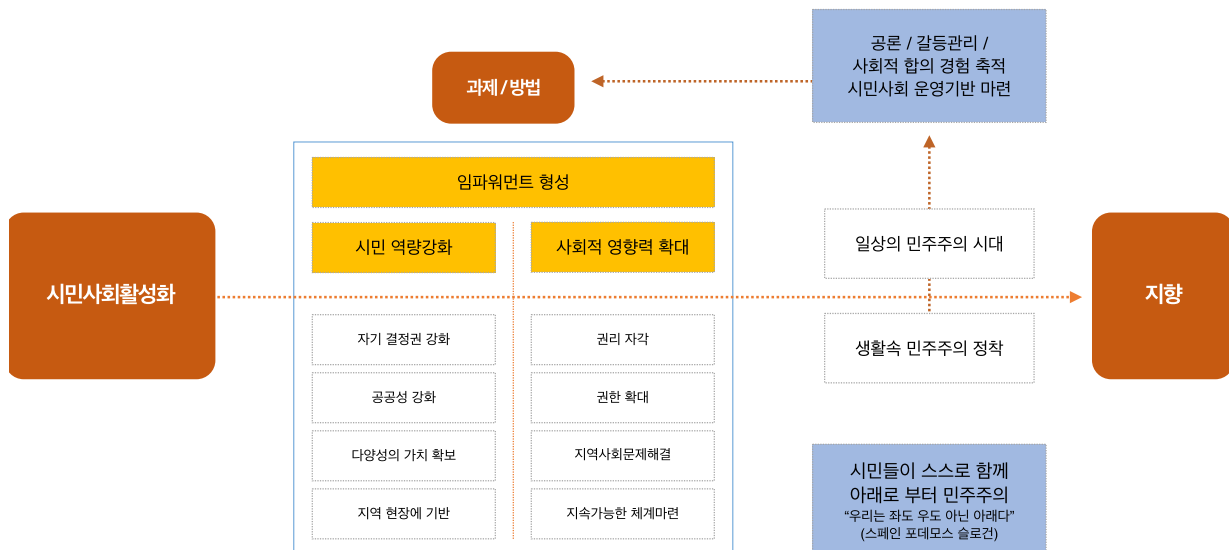
소수에서 다수가 / 민주와 공화의 경계 / 권한의 문제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고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결국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가능한 정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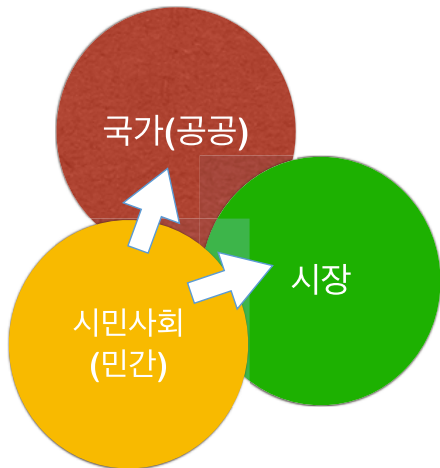
시민이 권한을 가지고 사회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권한 = 의사결정 권한 + 집행의 권한)

결국,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마을에 기반한 물적토대 마련



벽 너머 새로운 상상 ? /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 7원칙 중)

이슈, 사회문제해결을 넘어 물적기반마련을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지난 30여년, 시민사회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력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지원체계 마련

연결과 협력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에 기반한 시민사회 물적 토대 구축

시민사회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다양해진 시대에
시민사회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등 외부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간 연대를 통한 새로운 운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라시, 연대로 스며들다

노동-시민사회의 연대 무대, 솔라시¹³⁾

손우정(솔라시 추진기획단)

정례적인 연대의 장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 솔라시

솔라시(Sollaci, Solidarity of Labor and Civic Society)는 노동과 시민사회의 정례적인 연대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연대는 계속되었지만, 다양한 범위의 활동가를 포괄하는 정례적인 연대의 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부문별 활동가대회가 다시 시도되고 있지만, 솔라시 기획은 부문과 영역을 초월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안정적 연대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그동안 유사한 시도가 기획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솔라시 기획은 주로 노동조합이 출현한 기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¹⁴⁾들이 협력해 초기 재정을 지원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솔라시 기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사회운동 전반의 의제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 공연과 각종 행사가 축제처럼 어우러지는 공론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알메달렌이 주요 정당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별다른 모집이나 조직화가 없어도 여름 휴가

13) 솔라시 기획은 제안자가 공익활동가를 초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부 기획과 집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열린 기획이다. 따라서 아래의 인식과 기획 방향은 참여 주체의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4) 공익활동가들의 정례적인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은 공익재단은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5개다.

철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축제를 즐기는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다. 따라서 이 기획은 다양한 영역과 부문의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의 장을 정례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단순한 기획이지만, 저마다의 특유한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결합해 매력 있고 재미있으며 지속가능한 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게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솔라시의 기획 의도와 초기 방향에 대해 해설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완성도 있는 포럼이 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 연대 포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솔라시 기획에 대해 많은 활동가가 가장 낯설어하는 점은 ‘노동-시민사회 연대 포럼’이라는 개념이다. 사실 이런 낯섦과 뒤따르는 여러 질문을 우회하고자 솔라시라는 약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에게 연대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특별히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말하는가?

노동이나 노동조합활동을 비롯해 정당까지도 포함하는 서구의 광의적 시민사회 개념과 달리, 우리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사용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의 오해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자기 조직화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사회운동, 생활 밀착형 운동을 표방한 흐름이 나타났고, 이를 기존의 민중운동과 구분하기 위해 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 이 구분의 이면에는 정치적 입장과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만, 주로 자기 내부 의제에 주력하는 노동과 공적 의제에 주력하는 시민운동은 운영 원리와 내부 문화도 차이를 보인다. 노동과 시민사회가 수많은 공동 이슈로 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 운영의 원리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환의 키워드가 넘쳐날 정도로 사회 저변에서부터 변화의 힘이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운동을 둘러싼 환경 역시 급변했으며, 각 운동과 단체, 조직 내부의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연대의 언

어는 넘쳐나지만, 실상 우리의 연대는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솔라시가 표방하는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점차 이질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분리된 것, 서로 다른 것,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연대를 요청하는 선언이다. 솔라시의 이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연대가 깊어질수록 솔라시의 이름마저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활동가대회와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솔라시의 기획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느 활동가대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 기획은 매년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 제안 취지에 국한해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솔라시 기획이 다른 활동가대회가 가장 다른 점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구성의 차이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안의 기본 취지는 그동안 조금은 분리된 채 활동해 왔던 노동과 시민사회가 서로를 교차하는 연대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노동과 시민사회의 부문 연대만이 아니라 노동 내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낯섦과 마주하자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참여하는가? 물론 정례적인 연대의 장이 자리 잡게 되면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포럼처럼 노총 차원의 결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작더라도 안정적인 연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올해에는 아직 연결되지 못했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활동가, 신생노조나 플랫폼·불안정 노동자, 고립된 상황에 놓인 연구자나 학술운동가, 청년, 소규모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참여 주체로 세우고 노동, 시민사회, 마을,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활동을 연계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결되지 못한 이들이 솔라시 기획이라고 해서 그냥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을 연결하고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풍부한 연결망과 경험

을 가진 노동·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솔라시 기획은 이런 경험을 가진 활동가와 단체들이 그동안 연결되지 못한 활동가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과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워 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사회포럼 등 기존의 대규모 연대 포럼이 주로 사회적·정치적 쟁점과 의제, 즉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솔라시는 연대에 관한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서로의 경계와 장벽을 낮추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머리 아픈 논쟁과 토론 따위는 피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향후 정례적인 연대의 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과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미다.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참신한 기획보다는 솔라시가 아니었다면 연결되지 않았던 이들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익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쳐온 이름 없는 활동가들에게 지지와 응원의 마음,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도처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알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물론 솔라시 포럼의 프로그램은 참가 주체들이 제안하는 논쟁과 토론의 공론장도 당연히 포함하며, 연대의 핵심 과제와 실천 목표가 합의될 수 있다. 그러나 포럼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덧붙여, 솔라시의 제안은 연결되지 못한 이들의 '무대'를 만들 뿐, 무대를 꾸미고 스토리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 주체라는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솔라시 기획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조건에서 기획 없는 기획으로 출발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처음의 시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몇 차례의 지루한 회의와 다양한 만남과 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생각과 문화, 가치를 알아 가는 이 과정이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매년 정례화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 기획의 첫 출발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여러 이견의 충돌을 경험하며 새로운 풍토와 원칙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솔라시는 단지 2박 3일의 포럼이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포럼, 포럼 이후의 평가와 향후 기획을 논의하는 일련의 흐름을 포함한다. 솔라시는 내용이 아직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채워가고 있는 프로젝트다.

어떻게 추진해 가는가?

솔라시는 초기 기획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추진 기조를 세운 바 있다. 첫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적인 연대문화를 위한 포럼과 축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올해 행사 종료 후 예정된 토론회는 단순히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개선 방향,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둘째,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포럼을 지향하기로 했다. 부문과 세대, 의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 주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언컨퍼런스(Unconference)방식을 추구한다. 참여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공동 책임과 공동 권한이다. 이 기획은 5개 공익재단이 제안하고 상당한 재정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함께 기획을 논의하고 있는 단체가 포럼의 대상이거나 단순 참여자는 아니다. 초동 논의에서부터 참여단체는 모두 주체적인 입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로 했다. 솔라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참가단체나 개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기획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상당한 비효율성을 동반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협력적 역량만큼의 성과로 운영되는 것이 2023년의 솔라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5개 기금대표와 초기 참여단체 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솔라시 기획의 출발을 결정했고, 2월 8일에는 각 단체 사업담당자가 모인 회의에서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월 22일에는 솔라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한 기획 워크숍을 진행했다. 오늘 ‘여는 포럼’으로 솔라시 기획을 공식화하고 의견을 들은 뒤, 3월까지 몇 차례의 기획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포럼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럼은 다른 부문별 활동가대회 일정을 피한다면 대략 8월 말에서 9월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장소와 일정, 대략적인 기획 방향이 합의되면 솔라시 참여 주체를 본격적으로 초대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언론사 공동 기획,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대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등을 기획할 예정

이다. 이 기획이 단지 2박 3일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연대의 필요성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공익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소셜부스와 협력해 온라인 페이지¹⁵⁾에서 진행한다.

단계	제안과 경청 (1월~3월)	계획 확정, 참여 주체 초대 (4월~8월)	솔라시 개최 (8월말~9월)	평가와 준비 (10월~12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장 회의(1.19.) ■ 사업담당자 회의(2.8.) ■ 기획워크숍(1차: 2.22.) ■ 여는 포럼(3.7.) ■ 주요 단체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시 개최 날짜, 장소 확정(4월) ■ 기획 워크숍(1박2일) ■ 언론-온라인 기획 ■ 참가 주체 초대(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시 평가 및 정리 ■ 24년 포럼 기획

운영 프로그램은 기획 워크숍 등을 통해 유사한 경험과 사례를 참고한 기획과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채우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다. 여기에는 유사 부문 활동가들의 연대 프로그램부터 경계와 부문을 초월한 공동 프로그램, 상호 교류와 연대 문화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성격도 문화행사, 학술·쟁점 토론과 공론장, 체험·체육 행사 등 다양한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솔라시의 기대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기획 토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낯선 주체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솔라시가 아니었다면 연결되지 못했을 노동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임을 느끼는 ‘연대의 부흥회’가 만들어진다면, 올해 솔라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기대처럼 순탄하거나 아름답기만 하지

15) 솔라시의 온라인 기획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s://socialbooth.co.kr/sollaci>

는 앓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기획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는 연대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는 포럼은 솔라시의 기획 취지를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고, 함께 아이디어, 재력, 능력을 모아 빈 내용을 채워 나가는 자리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초기 기획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획의 빈 곳을 채울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다. 새로운 연대문화 창출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만큼의 기획을 채우는 것이 준비 과정의 목표다.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